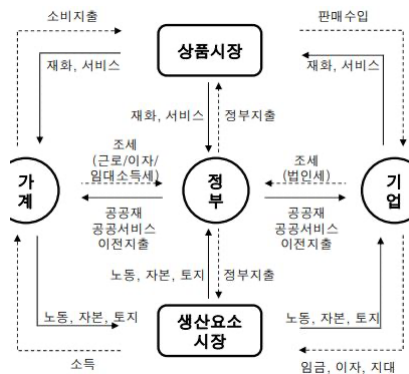


(2-1) 경제학의 대상과 분류

[경제순환모형도]



정부: 조세를 부과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공급

[경제학의 분류 ① 분석의 단위: 미시경제학 vs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 각 경제주체(소비자, 생산자, 정부)들의 개별적인 경제행위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
- 거시경제학: 국가경제 전반(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의 움직임을 분석

[경제학의 분류 ② 분석의 내용: 실증적 분석 vs 규범적 분석]

- 실증적 분석: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정의, 과학적 분석, 인과관계), 경제학 이론의 대부분을 차지
- 규범적 분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가치판단)

[경제학의 분류 ③ 과학적 단계: 이론경제학 vs 응용경제학]

- 이론경제학: 경제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바람직한 경제모형의 명제들은 현실설명력을 지녀야 함)
- 응용경제학: 이론경제학에서 도출된 명제들을 가설로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지 확인(통계학적)
- 이 둘은 보완적 혹은 순환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학의 과학적 체계 완성

(2-2) 경제학적 사고의 출발점

[경제학의 기본 가정: 합리성]

-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가정함으로써 이들의 모든 경제행위들이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사고로부터 출발

[합리적 선택의 방법: ① 목표와 제약에 대한 명확한 파악]

-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첫 단계
- 제약요인은 결국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

[합리적 선택의 방법: ② 기회비용을 고려]

- 상충관계: 하나의 선택을 하려면 다른 선택을 반드시 포기하여야 할 때 두 선택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함.
- 상충관계는 자원의 희소성(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 이러한 상충관계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함.
- 어떤 선택을 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은 그 선택에 의한 명시적 비용 뿐 아니라 그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대안들이 주는 가치들 중 그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포함

[합리적 선택의 방법: ③ 한계적 분석]

- 경제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하는 경우, 그 한계적 행동이 가져오는 한계적 편익과 한계적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 한계적 분석에 의한 결정방식은 경제주체의 **순편익(편익-비용)**을 **극대화**시키게 됨
- 한계순편익이 작아야 함
ex. 뷔페 레스토랑,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동일**할 때까지 먹는 것이 합리적 결정/ 이 예에서 처음 지불한 5만원은 이미 지불해 버린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매몰비용이라 하며, 몇 접시를 먹을 것인가라는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2-3) 경제학의 분석 사례: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의 주요 가정]

- 하나의 생산주체가 존재하며 이 생산주체는 유한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와 일정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
- 이 생산주체는 오직 두 가지 상품만을 생산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생산가능곡선: 한 생산주체가 주어진 기술을 이용하여 가용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남김없이 투입하였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

[생산가능곡선의 경제학적 의미]

-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부호: 상충관계의 개념과 일치
: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의 부호는 언제나 음의 값
-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 기회비용의 개념과 일치
: 피자 생산을 한 단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음료수가 2병이라는 것을 의미

[생산가능곡선: 일반적인 경우]

- :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목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은 생산가능곡선 상에서만 만족됨
- 희소성: 생산자원(생산요소와 기술)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생산 불가능집합이 존재
- 상충관계: 생산가능곡선 우하향
- 직선인 생산가능곡선의 경우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든 동일하며 이 기울기가 가로축 재화 생

산의 기회비용(단위는 세로축 재화의 단위)

- 생산가능곡선이 곡선일 경우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 생산가능곡선에 접한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
-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의 개념과 일치
-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측정되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한계변환율이라 부름
- 생산가능곡선이 오목한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측정한 기회비용(한계변환율)이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이를 한계변환율 체증의 법칙이라 함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가용한 생산투입요소나 기술이 변화하면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이동

경제성장: 생산투입요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 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

- 생산가능곡선의 대칭적 확장: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생산투입요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정도의 기술발전이 일어나는 경우
- 생산가능곡선의 비대칭적 확장: X재에 특화된 생산요소만 증가하거나 X산업의 생산기술만이 발전하는 경우

(3-1)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수요]

- 특정 재화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임(ex, 자동차에서 다른 요소들: 연료 가격, 경쟁 차종 가격, 소득수준, 특정 차종의 유행, 자동차의 미래가격, 인구의 증가)

[시장수요 곡선: 시장수요량의 변화]

- 수요의 법칙: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가격과 시장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
- 가격의 변화는 시장수요량을 변화

[시장수요 곡선의 이동: 시장수요 자체의 변화]

- 일단 시장수요 곡선이 주어지면,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그 시장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
- 관련된 재화의 가격,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기호나 유행, 그 재화의 기대되는 미래가격,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수 등이 변화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가 변화

[시장공급]

- 특정 재화의 시장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ex, 자동차 시장의 다른 요소들/노동과 자본의 가격, 기술진보, 자동차의 미래가격, 생산자의 수(가 많으면 시장공급 증가))
- 공급의 법칙: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가격과 시장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시장공급 곡선은 우상향
- 주어진 시장공급 곡선 하에서 가격의 변화는 시장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을 유발하며 이 때

가격의 변화는 시장공급량을 변화시킨다고 함

[시장공급 곡선의 이동: 시장공급 자체의 변화]

- 일단 시장공급 곡선이 주어지면,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그 시장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
- 생산투입요소의 가격, 기술수준, 기대되는 미래가격, 생산자의 수 등이 변화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 재화에 대한 시장공급이 변화

[시장균형: 중형차 시장의 예]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 자동차 가격 3천만원 → 시장수요량이 시장공급량 초과(초과수요 상태) → 소비자들 간의 경쟁 → 가격 상승 압력
- 자동차 가격 6천만원 → 시장공급량이 시장수요량 초과(초과공급 상태) → 공급자들 간의 경쟁 → 가격하락 압력
- 자동차 가격 4천만원 →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 일치 → 가격이 그대로 유지 → 이를 시장균형이라 함

[시장의 원리와 시장균형]

- 시장의 원리는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때 소비자들 가느이 경쟁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할 때 생산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함
- 이를 가격을 통한 시장의 조정과정, 가격기구, 시장기구 등이라고 함
- 이러한 가격을 통한 시장의 조정과정을 통해 결국 시장은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을 달성하게 됨.
- 시장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시장균형 가격, 이 때의 거래량을 시장균형 거래량이라 함

[시장균형의 변동]

- 가격이 변화할 때에는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변화(수요 및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
-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할 때는 수요 혹은 공급이 변화(수요 및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 시장균형은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ex.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이 변화하여 시장수요 곡선이나 시장공급 곡선이 변화하면 변동

(3-2) 탄력성

[탄력성의 개념]

- 탄력성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 시장수요량이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시장수요량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생산자의 타격은 작으나 시장수요량이 크게 반응하면 생산자의 타격은 클 것임)
- Y의 X탄력성 = $\frac{Y\text{의}\% \text{변화율}}{X\text{의}\% \text{변화율}}$

[수요의 가격탄력성]

$$- \text{정의}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frac{\frac{\text{수요량의 변화분}}{\text{기준수요량}} \times 100}{\frac{\text{가격의 변화분}}{\text{기준가격}} \times 100}$$

- 점 A와 B가 관측되었을 때 A→B/B→A 에 따라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변화율 계산 시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가격, 기준 수요량)을 (중간점 가격, 중간점 수요량)으로 대체하는 중간점 이용법을 사용

중간점 이용법 사용

(중간점 수요량, 중간점 가격)

A(40, 8), M(50, 7), B(60, 6)

$$\frac{\frac{60-40}{50} \times 100}{\frac{6-8}{8} \times 100} = -1.4$$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성 정도의 구분]

: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음이므로 절댓값으로 설명

=0	<1	=1	>1	∞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변하지 않음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미만 감소(증가)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감소(증가)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초과 감소(증가)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무한히 감소(증가)
그래프 수직		그래프 원점 오목		그래프 누워있음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신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즉 소비자들의 협상력 혹은 적응력을 반영

- 1) 대체재의 유무: 대체재 多 → 소비자 협상력 ↑ → 탄력성 ↑
- 2) 일상 생활에서의 중요성 (중요성 ↑ → 소비자 협상력 ↓ → 탄력성 ↓)
- 3) 기간의 길고 짧음(단기 → 소비자 협상력 ↓ → 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과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양의 부호를 가짐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자들의 시장 협상력 및 적응력 반영

- 1) 상품의 저장가능성 및 저장비용: 저장가능성 ↓ or 저장비용 ↑ → 생산자 협상력 ↓ → 탄력성 ↓
- 2)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의 변화 정도: 상품가격 ↑ → 생산비용 급격 증가 → 탄력성 ↓
- 3) 기간의 길고 짧음(장기 → 생산자 적응력 ↑ → 탄력성 ↑)

[기타 주요 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소득의 변화율}}$

ϵ_M	$\epsilon_M > 0$	$0 < \epsilon_M < 1$	$\epsilon_M > 1$	$\epsilon_M < 0$
구분	정상재 소득 $\uparrow \rightarrow$ 수요량 \uparrow	필수재 소득 $\uparrow \rightarrow$ 더 구매 X ex. 소금, 치약	사치재 소득 $\uparrow \rightarrow$ 구매 \uparrow ex. 명품소금	열등재 소득 $\uparrow \rightarrow$ 수요량 \downarrow ex. 지하철, 서비스

수요의 교차탄력성 = $\frac{Y\text{재 수요량의 변화율}}{X\text{재 가격의 변화율}}$

	$\epsilon_C > 0$	$\epsilon_C < 0$
구분	Y는 X의 대체재 ex. 맥주와 포도주	Y는 X의 보완재 ex. 커피와 커피크림

(3-3) 시장균형과 사회적 후생

[시장균형의 재음미]

- 시장균형은 시장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
- # 시장균형의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인가?
- 시장균형은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에 의해 결정
-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개별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계획과 생산 계획의 합
- 시장이 균형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두 경제주체 모두 자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계획과 생산계획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
- 더욱이 시장균형에서는 이 두 경제주체들의 합리적·효율적 행동이 하나의 균형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음
- 즉 시장균형은 합리적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시장균형에서는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의미

[시장으로부터의 이득: 소비자의 입장]

지불의사 곡선

- 어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을 지불의사 혹은 유보가격이라 함
- 유보가격은 그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혹은 행복감의 화폐 환산액과 일치
- 이제 어느 시장에 참가하려는 소비자들을 그 지불의사가 큰 순서로 가로축에 나열하고 각 소비자들의 유보가격을 세로축에 측정
-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각각의 유보가격을 잇는 우하향하는 선분을 그릴 수 있으며 이를 지불의사 곡선이라 함

지불의사 곡선은 시장수요 곡선을 반대로 읽은 것에 불과

- 시장수요 곡선: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용의가 있는 수요량
- 지불의사 곡선: 주어진 수요량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마지막 소비자의 지불의사

- 시장수요 곡선 아래쪽 면적은 이 재화를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의 총합 혹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화폐환산 총액으로 해석

소비자 잉여

- 시장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합의 의미(지불 의사 곡선으로부터의 해석)
- 만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소비자는 자신의 지불의사를 지불
- 그러나 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시장가격만이 존재하기에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금액 지불
- 따라서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지부르이사가 있는 금액의 합(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화폐 환산총액)과 실제 지불금액의 합의 차이만큼의 잉여를 향유
-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소비자잉여라고 함(소비자잉여=지불의사금액의 합-실제 지불금액의 합)
-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잉여를 향유(시장수요 곡선 아래쪽이면서 시장가격 위쪽의 영역으로 추정)

[시장으로부터의 이득: 생산자의 입장]

수취의사 가격

- 어떤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수취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가격을 말함
- 수취의사 가격은 그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동일
- 이제 어느 시장에 참가하려는 생산자들을 그 수취의사가 작은 순서로 가로축에 나열하고 세로축에는 각 생산자들의 수취의사 가격을 측정
-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각각의 수취의사 가격을 잇는 우상향하는 선분을 그릴 수 있으며 이를 수취의사 곡선이라 함

그런데 수취의사 곡선은 결국 시장공급 곡선을 반대로 읽은 것에 불과

- 시장공급 곡선: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들이 판매할 용의가 있는 공급량
- 수취의사 곡선: 주어진 공급량을 생산자들이 판매할 때 마지막 생산자의 수취의사
- 즉 시장공급 곡선과 수취의사 곡선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

시장공급 곡선을 수취의사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생산자의 비용을 측정하는 데 편리

- 시장공급 곡선 아래쪽 면적은 이 재화를 생산자들이 판매할 때 수취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의 총합 혹은 생산비용의 총액으로 해석
- 생산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 잉여를 향유(시장공급 곡선 위쪽이면서 시장가격 아래쪽의 영역으로 추정)

생산자 잉여

- 시장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은 Q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의 총합 혹은 생산비용의 총합을 의미(수취의사 곡선으로부터의 해석)
- 만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생산자는 자신의 수취의사(생산비용)만큼만 수취 가능
- 그러나 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시장가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생산자는 동일한 금액을 수취
- 따라서 생산자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수취액과 생산비용 합의 차이만큼의 잉여를 향유
-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잉여를 생산자 잉여라고 함(생산자 잉여=실제 수취액의 합-생산비용의 합)

[시장균형의 효율성]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각각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 두 잉여의 합을 사회적 잉여라 함

- 사회적 잉여는 결국 시장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수행할 때 달성되는 시장균형에서 극대화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Adam Smith의 사상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4-1)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부개입의 이유]

- 시장실패: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ex. 시장에 다수의 생산자X)
- 형평성의 문제: 시장이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으나 경제 주체들 간의 형평성 혹은 공정성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ex.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로의 소득 재분배 개입)
- 소비(생산)의 진작 혹은 억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의 소비·생산을 진작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생산을 억제(ex. 담배에 대한 조세)

[정부개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유]

- 정부개입은 언제나 시장의 효율성을 악화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아 정해진 최고가격 이하의 가격에서만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

- 가격상한제는 주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도(개발도상국 등에서 주요 식량에 대한 가격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등)
- 가격상한제 도입에 따라 초과수요 발생

[가격상한제와 사회후생의 변화]

- 사회적 후생의 손실
- $c+e$ (소비자 잉여의 한 부분+생산자 잉여의 한 부분)는 이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사라져 버린 영역이므로 가격상한제로 인한 자중손실이라 부름

[가격상한제의 다른 문제점들]

최고가격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가격에서 이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 일부는 이를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

-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질 저하시킬 유인(ex. 임대료 가격상한제 → 뉴욕 집)
- 제한된 공급물량을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추구행위(사적이익추구) 가능성
+. 선착순 배분 등이 가능하나 배분권을 가진 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부정부패 발생
- 불법적인 암시장 형성(높은 가격에 되팔음)

[가격하한제: 최저임금제]

가격하한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아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노동의 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
- 최저임금제로 인해 임금은 하락할 수 없으며, 노동 공급자(노동자)들은 노동 수요자(기업)가 수요하는 것만큼만을 공급할 수 있음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후생의 변화]

- $c+e$ (원래 소비자 잉여의 한 부분+원래 공급자 잉여의 한 부분)는 이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사라져 버린 영역이므로 최저임금제로 인한 자중손실이라 부름

[최저임금제 관련 논쟁]

- 최저임금은 중산층 가정의 자녀에게 주로 적용
-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어도 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들, 즉 비자발적 실업을 창출
-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일자리를 줄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통계적 분석도 다수 존재

(4-2) 조세에 의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통한 정부의 개입]

-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음
- 조세 부과는 주로 해당 재화의 거래량을 줄이고자 할 때 사용되며 정부수입을 증가시킴
- 보조금 지급은 주로 해당 재화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며 정부지출을 증가(혹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게 됨

	소비행위	생산행위
조세	소비세	판매세(혹은 생산세)
보조금	소비 보조금	생산 보조금

[소비세 도입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 소비세의 부과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수요곡선 D)과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새로운 수요곡선 $D-t$) 사이에 괴리를 창출

[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

- 원래 균형에서, 시장균형=생산점=소비점
- 소비세 부과로 소비점과 생산점간의 괴리 발생: 시장균형=생산점 \neq 소비점

[소비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 소비세의 도입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사회적 순손실을 창출

[판매세 도입에 따른 생산자 행동의 변화]

: 판매세의 부과는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금액(공급곡선 S)과 생산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새로운 공급곡선 S+t) 사이에 괴리를 창출

[판매세 도입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

: 판매세 부과로 인한 괴리, 시장균형=소비점 ≠ 생산점

[판매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 판매세의 도입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사회적 순손실을 창출

[소비세와 판매세의 동질성]

소비세와 판매세는 시장균형 가격이 소비세는 하락하고 판매세는 상승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동일

- 생산점의 변화, 소비점의 변화
-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 감소, 정부수입 증가, 사회적 후생 감소

[조세의 부담]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잉여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 때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가는 일반적으로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

- 수요의 가격탄력성 ↑ → 소비자의 협상력·적응력 ↑ → 소비자 부담 ↓
- 공급의 가격탄력성 ↑ → 공급자의 협상력·적응력 ↑ → 공급자 부담 ↓

[요약]

- 소비세의 도입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와 소비자들의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를 창출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점과 생산자들의 생산점이 불일치
- 판매세의 도입은 시장에서 생산자들이 생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가격과 생산자들의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를 창출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들의 생산점과 소비자들의 소비점이 불일치

-

(4-3) 관세에 의한 정부의 개입

[소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순손실의 의미]

생산에 있어서의 비효율

- 자유무역 시 국내 가격에서는 생존하지 못하였을 생산자들이 관세부과로 국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을 영위
- 관세의 부과는 비경쟁적인 생산자들도 시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창출

소비에 있어서의 비효율

- 자유무역 시와 비교할 때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창출

[대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순손실의 의미]

소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역 b와 영역 d는 각각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득

- $\text{영역}e = \text{관세 부과 후 수입량} * (\text{관세 부과 전 세계 시장 가격} - \text{관세 부과 후 세계 시장 가격})$
- 관세 부과 전후 세계 시장 가격의 변화는 대국인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
- $\text{교역조건} = \text{수출재의 가격} / \text{수입재의 가격}$
- 이는 관세의 부과로 이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구매하는 수입재의 가격을 하락시켰으므로 교역조건 개선을 의미

[요약]

- 어느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잉여는 감소하나 이를 더싼 세계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된 국내 소비자들의 잉여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후생이 증가(무역의 이득)
 - 수입국이 소국일 때 관세의 부과는 언제나 수입국의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는 관세의 부과가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
 - 수입국이 대국일 때 관세의 부과가 수입국의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득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
-

(5-1) 소비자의 제약과 목적

[소비자의 제약]

-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게 되는 제약은 예산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산 제약

[소비자 제약의 일반화]

예산선: 소비자의 예산과 재화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모든 묶음

- 주어진 변수: X재의 가격, Y재의 가격, 예산
- 선택 가능한 변수: X재의 소비량, Y재의 소비량
- 예산선: $(X\text{재의 가격}) * X + (Y\text{재의 가격}) * Y = M$
- 예산선을 기준으로 소비 가능집합과 소비 불가능집합이 구분됨

[예산선 기울기의 의미]

‘피자 2천원, 음료수 1천원’

- 기울기의 절대값 2는 음료수의 단위로 표시한 피자 한 조각 소비의 기회비용, 이는 시장이 결정한 X재와 Y재 사이의 객관적 교환비율임에 유의(시장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환비율)

[예산선의 변화]

주어진 가격이나 예산이 변화하면 예산선도 변화

1. 소득 증가: 예산선 기울기는 그대로인 채로 절편만 증가(예산선 평행이동)
2. P_X 가 하락하는 경우: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가로축 절편 증가

[소비자의 목적]

- # 소비자의 목적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를 통한 행복 혹은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
- 소비를 통한 행복 혹은 만족을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 부르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

(5-2) 소비자의 선택

[효용의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 # 소비자가 특정한 양의 (X, Y)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 지리학의 등고선 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효용수준을 2차원 평면에 표시할 수 있음

[무차별곡선]

- # 지도의 등고선이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듯,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잇는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이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이라 함
-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 점을 선택하든 무차별
- 무차별곡선은 등고선과 특성이 비슷: 두 무차별곡선은 만날 수 없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효용을 줌
- 무차별곡선은 두 재화묶음 간의 선호를 알려줌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의미]

- # 점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2
- 이 소비자가 X재의 소비를 한 단위 줄이는 대신 Y재를 두 단위 더 소비한다면 이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동일(A와 B는 무차별)
- 이 소비자가 X재 1단위와 교환(대체)하고자 하는 Y재의 수량은 2.(이 소비자는 X재 1단위의 가치가 Y재 2단위와 동일하다고 평가)
- 이는 이 소비자가 평가하는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1단위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
-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를 Y재로 대체할 때의 주관적 교환비율을 한계대체율이라 함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 # 한계대체율: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1단위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로 해석
- 이는 무차별곡선 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으로 측정
- # X재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계대체율은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 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 #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달성
- 이는 예산선이 무차별곡선에 접할 때 달성
- # 효용극대화 조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와 예산선의 기울기(X의 상대가격)가 일치(=X재와 Y재의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비율=시장에서의 객관적 교환비율)

(5-3) 소비자 선택 이론의 확장

[한계효용]

- 한계효용: 다른 재화의 소비수준은 그대로 두고, 오직 한 재화의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느끼는 효용의 증가분(ex. 피자과 음료수를 소비하는 경우 두 개의 한계효용 정의가능)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다른 재화의 소비수준은 그대로 두고, 한 재화의 소비를 한 단위씩 계속 증가시키면 한계효용 감소
- 한계대체율은 두 한계효용의 비율로 정의 가능: $MRS_{XY} = \frac{M_X}{M_Y}$

[소비곡선]

- #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고 소득만 증가할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점들을 표시
: 가능한 모든 M에 대하여 이를 수행한 후 효용극대화 점을 이으면 이를 소득-소비 곡선이라 함
- #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고 X재의 가격만 감소할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점을 표시
: 가능한 모든 X재의 가격에 대하여 이를 수행한 후 효용극대화 점을 이으면 이를 가격-소비 곡선이라 함

[수요곡선의 도출]

- # 앞서 도출한 가격-소비곡선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 #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이의 수평합인 시장수요곡선도 우하향
→ 수요의 법칙 증명

(6-1) 기업의 목적과 단기비용

[기업의 목적과 제약]

- # 기업의 목적은 '이윤=총수입-총비용'을 극대화하는 것
- 총수입 \leftarrow 상품의 시장가격, 기업의 생산량
- 총비용 \leftarrow 생산요소의 시장가격, 기업의 기술수준, 기업의 생산량(하락시 총비용 하락)
- 기업 외부적 제약(시장제약): 시장가격, 노동, 자본 가격
- 기업 내부적 제약(기술적 제약): 기술수준
- 기업의 선택해야 하는 변수: 생산량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단기 생산곡선]

- # 자본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의 양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를 고려
- 단기라는 것은 자본의 양을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의미
- # 일반적으로 투입요소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생산함수라 하고 그 그래프를 생산곡선이라 함
- # 노동과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기 생산곡선은 일반적으로 S자 모양
- 노동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하나 그 한계생산은 체감
- 노동의 한계생산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결국 감소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총비용]

- # 노동 1단위의 가격이 2라고 가정하면 이 단기 생산곡선으로부터 노동비용을 도출
 - 노동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비용은 변화하므로 이를 총가변비용 곡선이라 함
- # 총비용 곡선의 도출
 - 자본의 양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자본 비용을 총고정비용이라 함
 - $\text{총비용} = \text{총가변비용} + \text{총고정비용}$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 # 총비용 곡선으로부터 평균비용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 평균비용: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 비용(총비용 곡선 상의 한 점과 원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 한계비용: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총비용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참고: 평균과 한계]

- #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비용 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것은 수학적 결과
 - 평균이 감소하려면 한계는 평균 아래에 위치
 - 평균이 증가하려면 한계는 평균 위에 위치

[요약]

- 일반적으로 단기에 자본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고정비용이 된다.
- 일반적으로 단기에 노동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총가변비용이 된다.
- 총비용은 생산요소의 가격, 기술수준이 일정할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 단기 생산함수는 자본이 일정할 때 노동 투입량 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며 노동의 한계생산은 종국적으로 체감
- 단기 생산함수로부터 총가변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총고정비용과 합하면 단기의 총비용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6-2) 기업의 장기비용

[단기 평균비용과 장기 평균비용]

- # 생산량을 증가시키기에 따라 어떤 수준의 자본량이라도 선택 가능하다면, 즉 장기에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맨 아랫부분을 선택하는 것
- : 이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아랫부분을 이은 곡선이 장기 평균비용 곡선(따라서 장기 평균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포락선(껍데기))

[장기 평균비용과 규모의 경제]

- # 만일 자본의 양을 매우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장기 평균비용은 매우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
- # 장기 평균비용 곡선은 생산규모가 변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줌
 1.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생산 초기)
 2. 규모의 불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생산량 많음)

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생산량이 증가해도 장기 평균비용이 변화하지 않는 현상(중양)

[장기 평균비용과 장기 한계비용]

평균과 한계 곡선의 관계에 따르면

- 평균비용이 하락하려면 한계비용은 평균비용 아래에 위치
- 평균비용이 상승하려면 한계비용은 평균비용 위에 위치
- 따라서 장기 한계비용 곡선은 장기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양

[기업의 목적과 제약: 재미미]

노동, 자본 가격, 기술수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 총수입 \leftarrow 상품의 시장가격, 기업의 생산량
- 총비용 \leftarrow 기업의 생산량 : 기업의 장단기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에 의해 파악가능

(6-3) 완전경쟁 하에서 기업의 선택

[완전경쟁 시장의 특징]

완전경쟁 시장: 완벽한 정보를 갖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

-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 한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동질적
-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음(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음)

→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느 가격수용자로서 행동(개별 수요자와 개별 공급자들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여기에서의 '장단기'는 비용함수에서의 '장단기'와 다른 의미

- 비용함수에서의 단기: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정도의 짧은 시간
-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불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수입]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과 생산량에 의해 결정

그러나 완전경쟁 하에서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P는 시장가격에서 고정

- 따라서 기업의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P에서 고정되어있을 뿐 아니라 동일
- $P=AR(\text{평균수입})=MR(\text{한계수입})$

[완전경제 하의 기업의 생산량 선택]

Reminder: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적 편익과 한계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 때 순편익(편익-비용)이 극대화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적용하면, 편익은 판매수입(TR), 비용은 생산비용(TC), 순편익은 이윤을 의미

-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을 일치시키는 생산량을 선택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공급곡선의 도출]

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 곡선을 따라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한계비용 곡선이 곧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

- 그러나 만일 가격이 AC의 최저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사각형 면적) 따라서 공급을 하지 않음

- 따라서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 중 AC의 위쪽 부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한계비용 곡선이므로 이 시장의 시장공급 곡선은 이들 단기 공급곡선의 수평 합. 따라서 단기의 시장공급 곡선도 우상향 → 공급의 법칙

장기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

-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향유 →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 → 시장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하락 → 시장진입 및 가격하락에 의한 이 조정과정은 기업의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지속

결국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서 기업의 생산점은 언제나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일치

- 어떤 이유로든 이 수준 이외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완전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가격은 회귀
- 따라서 장기의 시장공급 곡선은 P*에서 완전탄력적인 수평선(단기는 우상향)

[완전경쟁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

1. 기업의 장기 공급균형점이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 완전경쟁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방식(평균비용의 최저점)으로 생산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

2.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은 공급의 법칙을 위반하는가?

: 만일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비용(노동비용, 자본비용 등)이 증가하여 평균비용이 상승한다면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은 우상향

[요약]

- 완전경쟁 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과 동일하며 한계비용은 우상향
- 기업의 수가 고정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의 단기에서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 곡선 중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상의 부분
- 단기 시장공급 곡선은 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합한 것으로 공급의 법칙을 따름
- 장기에서는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므로 기업의 이윤은 0으로 조정되며 기업의 장기 생산점은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
- 장기 시장공급 곡선은 기업의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에서 수평인 완전탄력적 공급곡선이 되나, 생산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상승하면 장기 시장공급 곡선은 우상향

(7-1) 독점시장

[시장의 분류와 시장의 실패]

완전경쟁 시장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함

- 완전경쟁 시장: 완전정보, 다수의 공급자, 동질적 재화, 진입(탈퇴) 자유
- 독점시장: 유일한 공급자, 완벽한 진입장벽
- 과점시장: 2인 이상의 소수공급자, 동질적 재화, 상당한 진입장벽
- 독점적 경쟁시장: 수많은 공급자, 차별적 재화

완전경쟁 시장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장형태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고 말함

[독점의 정의와 존재이유]

독점: 대체재가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시장공급을 장악한 상태

- Microsoft의 OS 프로그램 시장 독점, 케이블방송의 지역독점 등
-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자는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지배력 혹은 독점적 지배력의 행사라고 함

독점의 존재이유: 진입장벽의 존재

1. 희소한 자원: De beers의 다이아몬드, 중국의 희토류
2. 규모의 경제: 케이블방송산업, 기반시설이 필요한 전력·가스·수도 → 자연독점 발생 가능
3. 정부의 개입: 지적재산권에 의한 사적 독점권
4. 공격적 전술: 인터넷 사업자들의 약탈적 가격행위 등

[독점기업의 목적]

독점기업 역시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수입-비용'을 극대화

Reminder: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적 편익과 한계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때 순편익(편익-비용)이 극대화

따라서 독점기업 역시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

- 한계비용은 기업의 생산곡선 → 총비용 → 한계비용으로 순서로 도출되는 것
- 한계수입은 총수입(가격*생산량)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독점기업과 완전경쟁 기업의 차이가 발생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독점기업은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수요 곡선 자체가 자신의 수요곡선

- 완전경쟁적 기업은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 하에서 자신의 수요곡선은 수평이라고 인식
- 독점기업은 어떤 가격도 부과할 수 있으나, 가격의 변동은 시장수요곡선을 따라서 시장수요량에 영향을 미침(수요의 법칙)
- 독점기업은 가격을 높이려면 수요량(판매할 수 있는 양)이 줄고, 수요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하락시켜야 하는 상충관계에 직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곡선]

완전경쟁기업은 생산량을 늘려도 가격 불변

: 따라서 경쟁기업의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시장가격 수준에서 일정 → $P=AR=MR$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인하

- 따라서 독점기업의 평균수입은 가격과 동일하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
- 평균수입이 하락하므로 한계수입은 평균수입보다 낮아야 함 $\rightarrow P=AR>MR$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 완전경쟁적 기업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하며, 이 수요곡선은 평균수입 곡선, 한계수입 곡선과도 일치
-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 곡선에 직면하며 이 수요곡선은 평균수입 곡선과 일치하지만, 한계수입 곡선은 평균수입 곡선(즉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선택
- 기업은 총수입(가격*생산량)을 극대화하면 됨
- 총수입의 구성요소 중 생산량은 이미 선택되었으므로 독점기업은 수요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시장수요 곡선 상의 점)을 독점가격으로 책정
- 극대화된 총이윤=총수입-총비용

[독점의 후생적 비용]

- 독점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
- 독점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완전경쟁 시장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서 더 적은 양을 소비

독점은 완전경쟁에 비해서 사회적 후생을 언제나 악화시킴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들은 반독점법 혹은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독점력 억제

[요약]

-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혹은 평균수입 곡선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한계수입 곡선도 우하향하며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
- 독점기업은 한계수입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선택하며 이 생산량에서 시장수요자들이 지불할 최대금액을 시장수요 곡선 상에서 독점가격으로 책정

(7-2)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의 정의와 특성]

독점적 경쟁: 수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구조

- 차별화된 제품: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대체재는 아닌 제품들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의 요소와 경쟁시장의 요소가 혼재하는 시장

- 독점적 요소: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므로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rightarrow 독점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다는 의미 따라서 $MR=MC$ 에서 생산량을 결정한 후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을 결정($P>MR=MC$)
- 경쟁적 요소: 수많은 대체재가 존재하기에 높은 가격 책정 불가 \rightarrow 결국 수많은 대체재들의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장기적으로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에 기업의 이윤은 0

[독점적 경쟁: 단기균형]

단기의 의미: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하여 기업 수가 고정

단기에서 차별화된 제품에 일정한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은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행동

[독점적 경쟁: 장기균형]

장기의 의미: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움

- 독점적 경쟁기업이 양의 이윤을 누리는 한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 없이 진입
-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하였으므로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1. 왼쪽으로 이동(개별기업의 수요 하락)
 2. 가격에 대해 보다 더 탄력적인 수요로 변화(대체재의 수 증가)

동일한 이윤극대화 과정을 거친 후 장기에서 결국 기업의 이윤은 0

[독점적 경쟁의 사회적 후생]

독점적 경쟁의 단기균형은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킴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도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나 장기균형은 자중손실 규모가 더 작음

[독점적 경쟁의 다른 특징들]

독점적 경쟁기업은 AC의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생산

- 독점적 경쟁기업은 효율적 규모보다 적게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 이는 독점적 경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생산활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 $P > MR = MC$, $P = AC$

- 독점적 경쟁기업은 완전경쟁 기업과 달리 MC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나 완전경쟁 기업과 같이 0의 이윤을 가짐
- 수많은 브랜드의 존재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독점적 경쟁기업의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보유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지는 않음

[요약]

-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단기 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됨
- 단기균형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높아 기업이 이윤을 향유할 수 있으나, 장기균형에서는 가격과 평균비용이 동일해져 기업의 이윤은 0
- 장단기균형 모두 완전경쟁에 비하여 자중손실이 발생하지만, 장기균형의 자중손실은 단기균형의 자중손실보다 작음

(7-3) 과점시장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과점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소수만 존재하는 시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과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

- 소수의 기업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행위는 다른 기업에 의해 쉽게 포착
-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신의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감안하여 자신의 행위를 선택
→ 이는 마치 과점기업들이 자신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쟁자들과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경제주체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게임이론의 접근법을 활용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복점시장은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한 종류

전략적 상호작용: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감안하여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 → 전략적 상호작용 연구 분야가 경제학의 게임이론

A, B가 담합을 하여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생산량과 총이윤을 반씩 나눌 경우 → (A와 B의 생산량 앞치락뒤치락) → 결국 이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멈추고 이것이 이 복점게임에서의 균형 → 이러한 균형을 Nash 균형이라고 함

- Nash 균형: B의 행위가 주어졌을 때 A가 현재의 행위를 바꿀 유인이 없고 그와 동시에 A의 행위가 주어졌을 때 B가 현재의 행위를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한 Nash 균형의 존재는 다음을 시사

- 결합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담합은 경제학적으로 불안정적 → 법적으로도 금지됨
-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은 법률적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불안정적인데 이는 과점 기업들이 사적이윤을 추구하기 때문
- 복점기업들 간의 사적이윤 추구에 의한 경쟁이 가격을 하락시키기는 하지만, 완전경쟁 수준의 가격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함 → 따라서 복점 역시 독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완전경쟁에 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창출

(9-1) 외부효과

[시장실패의 다른 요인들]

시장실패는 경쟁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완전경쟁 시장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의미

시장실패는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등 불완전 경쟁적 시장이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

1. 외부효과의 존재
2.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존재
3.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

완전경쟁적 상황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효율성이 자동적으로 달성되지만, 시장실패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외부효과의 정의와 종류]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 어떤 경제행위에 의해 유발된 편익이나 비용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가나 보상없이 주어지는 경우

1. 긍정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 지하철 역의 신축으로 부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 한 기업에서 수행한 R&D의 효과가 다른 기업에게 전이되는 경우
2. 부정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 지하철 역의 신축으로 부근의 버스회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
- 환경오염 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일으키는 소비·생산활동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구 온난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효과의 문제점]

외부효과는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 사이에 괴리를 창출

- 사적 편익·비용: 경제행위의 주체가 얻는 개인적인 편익·비용
- 사회적 편익·비용: 경제행위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편익·비용

사회적 편익=사적 편익+외부효과에 의한 외부편익

- 긍정적 외부효과 → 외부편익>0 → 사회적 편익>사적 편익
- 부정적 외부효과 → 외부편익<0 → 사회적 편익<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외부효과에 의한 외부비용

- 긍정적 외부효과 → 외부비용<0 →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
- 부정적 외부효과 → 외부비용>0 →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

: 사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

[시장수요·공급 곡선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시장수요·공급 곡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시장수요 곡선: 한 단위의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느끼는 한계적 편익(사적 한계편익, PMB)
- 시장공급 곡선: 한 단위의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적 비용(사적 한계비용, PMC)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균형 달성

-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편익·비용은 사적 편익·비용과 일치
- 시장균형은 사회적 효율성도 달성

[부정적 외부효과의 영향]

이제 생산과정에서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소비측면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

- 이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부정적 외부효과만큼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지게 됨을 의미
- 사회적 효율성은 $SMB=SMC$ 가 만족되는 점에서 달성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싼 가격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소비

- 소비측면에서만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후생의 변화]

-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더 크므로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할 경우 그 차이만큼의 사회적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
- 사회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에 비해 사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즉 과다 생산·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효율성 손실분으로 해석

- 이 사회적 손실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외부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로 해석해야 함

[부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피구세]

피구세: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정도만큼 생산활동에 과세

- 이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PMC대신 $SMC(=PMC+t)$ 를 따라 행동
- 이때 외부성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사라지는 대신, 정부개입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손실이 정확히 동일한 정도로 발생
-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 시장 외부자의 사회적 손실이 사라지는 대신 그것이 시장 내부자의 사회적 손실로 전환된 것
- 이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라 함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영향, 사회후생의 변화, 교정 방법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많이 거래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적게 거래한다는 것이 문제
- 사회적으로 효율적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
- 사회적으로 효율적 수준으로 더 많이 거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음

[요약]

-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소비·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를 부과하여 이를 교정
-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소비·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교정

(9-2)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의 속성과 그에 따른 종류]

재화의 속성

- 배제 가능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배제(금지)할 수 있는 속성
- 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를 못하거나 줄여야하는 속성

재화의 종류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합적	사적 재화(막히는 유료도로) :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재화	공유자원(막히는 무료도로) : 야생동물, 산림, 수산물 어장
비경합적	클럽재(유료영화/막히지 않는 유료도로) : 특정 클럽에 유료로 가입	공공재(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 국방, 신호등, 개방된 소프트웨어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 배제 불가능하면서 비경합적

: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으면서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없는 재화

→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

무임승차자: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공공재 문제의 해결]

가로등 무임승차자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들

1. 이 사업은 마을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2. 그러나 무임승차자의 존재로 사적기업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손해
 - 시장에 맡겨 두면 가로등은 과소 제공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음
 - 이는 가로등이 일단 설치되면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는 과소 생산됨)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 정부가 100만원을 들여 직접 가로수를 설치
- 마을주민 200명으로부터 각각 5천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
- 각 주민의 실제 효용은 만원이고 세금 5천원을 냈으므로 각 주민의 순편익은 5천원

[공유자원의 문제]

야생동물, 수산어종, 산림자원 등의 공유자원은

- 배제 불가능: 원래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없음
 - 경합적: 모든 자원은 유한하여 누군가 이를 소비했다면 다른 이의 소비는 줄어들
- 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들은 이 공유자원을 앞다투어 소비하려 할 것이며 이 때 공유자원의 양은 급속히 감소

공유자원의 비극

- 사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과도한 소비로 인해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 과도한 케비어 소비에 의한 철갑상어의 멸종 위기, 과도한 가축 소비에 의한 호랑이 멸종위기

공유자원 소비의 사적 효율성 원인

- 배제 불가능성에 의해 공유자원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0이므로 가격을 지불해야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

공유자원 소비의 사회적 비효율성 원인

- 경합성으로 인해 누군가 공유자원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
-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소비됨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

공유자원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1. 공유자원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 부재(배제 불가능)

2.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경합성)

해결방법

1. 소유권을 부여: 17C 영국의 enclosure movement

2. 조세의 부과: 환경세, 탄소세 등을 부과해 부정적 외부효과 교정(과다 소비 교정)

3. 정부의 직접 규제: 야생동물 포획을 직접 규제

[요약]

- 공공재는 사적인 공급자가 제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로부터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9-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의 정의]

완전정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직면한 선택과 관련한 정보들을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

-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자신들의 수요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정보를 보유

정보의 비대칭: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 기업에 대한 정보: 금융기관 vs 대출기업

≡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 중고차 구매자 vs 중고차 판매자

≡ 건강에 대한 정보: 생명보험 회사 vs 생명보험 가입자

→ 저음의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

[역선택과 레몬시장]

역선택: 정보열위자가 관찰할 수 없는 속성으로 인해 정보열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중고차시장의 문제를 레몬시장의 문제라고도 함

- 레몬 = 되풀이되어 고장 나는 중고차(질이 낮은 중고차)

- 중고차와 관련된 정보(사고이력, 수리이력 등): 정보우위자(판매자)vs정보열위자(구매자) → 정보의 비대칭성

- 구매자는 언제나 구매하려는 중고차가 레몬인지 의심하기에 가능하면 낮은 가격을 지불

- 따라서 정보우위를 가진 판매자는 질 좋은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으려 하려 하며 그 겨로가 시장에는 레몬만이 존재

- 결국 질 좋은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정보열위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발생

[역선택의 또 다른 예: 보험시장]

- 보험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 정보우위자(보험가입자) vs 정보열위자(보험사)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가 완전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평균적인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할 것

-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낮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

으려 할 것

-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평균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
- 결국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정보열위자(보험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주인-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 주인: 대리인에게 일을 시키는 자이나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하지 못함(대리인 행동에 대해 정보열위)
- 대리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이며 자신의 행동을 주인이 완전히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보우위)
-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인과 대리인 간에 존재
-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

도덕적 해이

- 주인-대리인 문제의 존재로 인해 불완전한 감시를 받는 대리인이 주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주인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
- 예) 고용주 vs 근로자, 주주 vs 기업인, 국민 vs 공무원/국회의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보험시장에는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존재

: 보험사(주인)가 보험가입자(대리인)를 완전히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운전을 더 부주의하게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역선택: 사람이나 재화의 숨겨진 속성과 관련,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부주의한 운전자 자동차보험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도덕적 해이: 사람들의 숨겨진 행위와 관련,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자동차보험을 든 운전자는 부주의할 가능성이 더 높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대응]

1. 선별: 정보가 부족한 쪽이 많은 쪽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시험, 면접에서 후보자에게 추천서 요구, 보험 가입 시 과거 사고기록 조사
2. 신호: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가 부족한 쪽에 사적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 중고차에 대한 품질인증서와 보증서 제공, 높은 교육수준, 광고를 통한 정보제공

(10-1) 국내총생산

[국가 경제규모의 측정]

국가 경제규모 측정의 목적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국가 내의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파악 → 그 국가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시계열적 변화)
- 한 시점에서 국가들 간의 경제규모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 → 국가경제의 상대적인 경

제적 지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횡단면적 차이)

경제의 순환관계와 경제규모의 계량화

- 한 국민경제에서 '생산총액=지출총액=소득총액'
- 생산총액=지출총액: 기업의 생산(판매)총액은 가계의 지출총액
- 지출총액=소득(수취)총액: 가계의 소비지출 총액은 소득(수취)총액
- 소득(지급)총액=생산총액: 기업의 소득(지급)총액은 생산(판매)총액

[경제의 순환과 경제규모의 측정]

: '생산총액=지출총액=소득총액' 이므로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측정하면 일국의 경제규모 측정가능

[국내총생산: 생산총액의 측정]

국내총생산

1. 일정 기간 동안: 통상 1년(혹은 1분기, 즉 3개월) 동안
2. 한 국가 안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그 국가 국경 내에서
3. 새롭게 생산된: 골동품, 중고차 등의 가치 제외
4. 최종 생산물의: 중간 생산물의 가치 제외
5. 시장가치의 총액: (재화·서비스의 양)*(재화·서비스의 가격)

최종 생산물의~ = 중간 생산물의 가치 제외 = 부가가치만 포함(새로 창출된 가치)

농민: 밀 5억원 생산	→ 부가가치: 5억원
제분업자: 밀 5억원 사들여 밀가루 8억원 생산	3억원
제과점: 밀가루 8억원 사들여 빵 15억원 생산	7억원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15억원	= 부가가치 합 15억원

[국내총생산의 분해: 지출측면]

$GDP=C+I+G+NX$

- 소비지출(C): 새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신규주택에 대한 가계지출은 제외 → 투자지출)
- 투자지출(I): 공장, 건물, 기계 등 새로 생산된 생산적인 투입요소에 대한 기업의 지출과 재고 그리고 신규주택에 대한 가계의 지출
 - + 재고: 새로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재화의 비축(미래 생산을 위한 기업의 투자)
- 정부지출(G):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전지출은 불포함 ex. 소득재분배를 위한 보조금)
- 순수출(NX): 수출액-수입액
 - 수출액: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해외구매 금액
 - 수입액: 소비·투자·정부지출 중 해외에서 생산된 금액

[국내총생산의 지표로서의 단점]

총생산 지표로서의 단점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불포함

1. 가계 생산액 누락: 목수가 자신을 위해 생산한 책상의 가치 누락
 2. 지하경제 규모 누락: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누락
 - 짧은 기간 내의 GDP 비교를 위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가계생산액이나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 하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GDP 비교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 후생수준의 척도로서의 단점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는 불포함
1. 여가의 가치 누락
 2. 공해 등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누락
 3. 범죄 등 사회문제의 변화 효과 누락
 4.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 누락
-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변화의 고려가 불가
 - GDP의 규모가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절대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명목 GDP]

- # 명목 GDP: 당해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 가격 상승에 기인한 명목 GDP의 상승은 진정한 경제규모의 확대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가격의 변화에 기인하는 명목 GDP의 변화 부분을 제거해낼 필요

[실질 GDP]

- # 실질 GDP: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 실질 GDP는 가격변화의 효과를 제거하여 수량(물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GDP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지표
- # 실질 GDP는 그 기준연도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절대값이 달라짐
- 따라서 실질 GDP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주로 그 절대수준이 아닌 연도별 증가율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

(10-2)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수준]

- # 물가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의미
- #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국민생활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

[물가지수의 측정]

- # 물가지수: 기준 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표준화하고 비교 시점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1. GDP Deflator: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이용하여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격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2. 소비자 물가지수: 보편적인 가계가 구매하는 소비재의 가격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3. 생산자 물가지수: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원자재나 자본재의 가격동향을 측정

하는 지표

인플레이션율: 특정한 두 연도 사이의 물가지수 증가율을 백분율로 측정한 것

[물가지수: GDP Deflator]

명목 GDP의 변화: 최종생산물 수량 변화와 가격 변화를 모두 반영

실질 GDP의 변화: 최종생산물 수량 변화

$GDP\ Deflator = (명목\ GDP / 실질GDP) \times 100$

- 결국 GDP Deflator는 기준년도에 비하여 비교년도 최종생산물의 평균적인 상대적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수량을 비교년도로 고정하고 물가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 그러나 GDP Deflator는 그 정의상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격만을 반영하므로 수입물가의 변화는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보편적인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들과 그 수량(장바구니)을 선택한 후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의 해당 상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작성

한계: 장바구니 구성을 기준년도로 고정하기 때문에 발생

- 언제나 기준년도의 소비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있을 경우 그 정도를 과장하여 반영하는 경향: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상품은 소비량이 줄게 되는데 줄어든 소비량을 반영하지 못함
-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를 과소하여 반영하는 경향
- 기술혁신 등에 의해 과거의 상품이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반영할 수 없음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가계의 장바구니가 아닌 기업의 장바구니를 이용

- 즉 보편적인 가계가 구매하는 장바구니가 아닌 산업용기계 등과 같이 기업이 구매하는 원자재나 자본재의 상품들로 장바구니를 구성
- 일반적으로 투입물의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들의 최종상품 구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는 향후 소비자물가지수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10-3) 실업

[실업과 고용]

실업: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

- 생산가능인구(W): 일할 능력을 갖춘 인구(한국은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L):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인구(=취업상태 인구(E)+실업상태 인구(U))
- 비경제활동인구(N):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 등의 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frac{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실업률: $\frac{\text{실업상태인구}}{\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실업과 고용]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실업자와 다름이 없는 구직단념자들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실업률의 정의는 실질적인 실업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이에 따라 고용률을 실업률과 함께 실업 혹은 고용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도위에 사용

지나치게 높은 실업은 개인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 개인 소득감소는 빈곤의 문제와 결부되어 개인적 후생에 큰 영향
- 가용한 자원이 사용될 수 없어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영향
- 따라서 실업은 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실업의 구분]

1. 마찰적 실업: 노동자의 이주, 이직, 경력전환 등에 의해 발생

-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동안 발생
- 노동자들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음
-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하며, 자연실업률이 0%가 될 수는 없음
- 결국 자연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한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의 실업률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노동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자연실업률도 다름(ex. 실업보험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국가의 경우 자연실업률도 높을 가능성)
- 정부는 기업의 구인/노동자의 구직정보의 제공 등을 활성화할 필요

2. 구조적 실업: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

- 쇠퇴하는 산업(단순 의류산업)에서 성장산업(IT 산업)으로의 이직이 쉽지 않기에 발생
- 경제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직업경험 등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 비자발적 실업이며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도록 하는 인력개발, 직업기술교육 강화 필요
- 학자에 따라서는 구조적 실업도 자연실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

3. 경기적 실업: 단기적 경기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실업

- 단기적 경기변동은 경기순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GDP 성장률의 변화로 반영
- 일반적으로 GDP 성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경기순환이라 부름
- 경기호황: 기업의 사업확장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경기적 실업 감소
- 경기불황: 기업의 사업축소로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경기적 실업 증가
- 경기적 실업은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총수요확대 정책 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실업

- 초기 노동시장균형은 점 E에서 달성→경기불황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하여 E'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균형이 달성된다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은 일반적으로 하방경직적이어서 W'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경기적 실업 발생

[임금 하방경직성의 원인]

- #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에 의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될 겨웅 발생할 가능성
-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를 효율임금이라 함
-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
- 기업들이 효율임금을 지불하는 원인은
 1. 높은 수준의 임금이 노동자의 이직을 줄이고 광고와 면접 및 신입 직원 훈련에 지출되는 경비를 절약
 2.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므로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함

[요약]

-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의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효율임금 등의 존재에 기인

(11-1) 경제성장의 중요성

[경제성장의 의미]

- # 빈곤의 탈피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
- 2019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10%가 하루에 1.9달러(빈곤선의 국제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 1990년 빈곤선 이하 생활인구는 전세계인구의 35%였으므로 빈곤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
-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달성된 것
- # 빈곤탈피를 떠나서라도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며 여기에 어떠한 정부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

[경제성장의 측정]

- #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개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
- 명목 GDP 증가율이 아닌 이유: 명목 GDP의 변화는 수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므로 여기에서 가격의 변화를 제거한 실질 GDP증가율을 사용
- 총 실질 GDP 증가율이 아닌 이유: 인구증가율이 총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개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악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총명목 GDP 증가율-인플레이션율-인구증가율

[70의 법칙]

일반적으로 변수 A에 대하여 다음의 법칙이 성립

- $70 = (A \text{의 연간 성장률, \%}) \times (A \text{가 두 배가 될 때까지의 연수})$

[성장률 차이의 효과]

같은 초기조건에서 시작하였을 때 작은 성장률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의 커다란 차이를 야기

[요약]

- 장기간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세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현상
- 경제규모가 두 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연수는 70을 경제규모의 연간 성장률로 나눈 것

(11-2) 경제성장의 결정요인1: 생산성과 생산요소

[생산성]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당 실질 GDP는 곧 노동생산성을 의미

- 1인당 실질 GDP는 국가 내 한 경제주체의 연간 소득액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민 한 사람(혹은 노동자 한 사람)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연간 최종생산물 양의 양을 측정
- 즉 경제성장은 노동생산성 증가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총생산함수와 생산성]

총생산함수: 거시적 생산함수로서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이 생산량(실질GDP)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나타냄

- $Y(\text{생산량}) = A(\text{기술수준}) \times f(L(\text{노동}), K(\text{물적자본}), H(\text{인적자본}))$
- 노동생산성 혹은 1인당 생산량(Y/L)을 결정하는 요인: 기술수준, 1인당 물적자본(K/L), 1인당 인적자본(H/L)

[생산성 격차의 원천]

1인당 생산량=기술수준*f(1인당 생산요소)

-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양의 값: 1인당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할수록 더 많은 1인당 산출물을 생산
-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할수록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완만: 1인당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

생산요소의 변화는 동일한 생산함수 상에서의 변화로 나타남

- 기술수준의 변화(기술진보)는 생산함수 자체의 변화로 나타남

[생산성 격차의 원천]

두 국가의 생산성 격차는 생산요소 축적의 차이, 기술수준의 차이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의하여 설명 가능

- 기술수준이 같다면 1인당 생산요소가 많이 축적된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이 많음
- 1인당 생산요소 축적 수준이 같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이 많음

[생산요소의 축적]

1. 물적자본: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는 장비와 구조물의 양
 - 물적자본은 기업들의 투자행위로부터 형성
 -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는 1인당 물적자본을 증가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원인
2. 인적자본: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식, 경험, 능력 등을 통칭
 - 노동자의 교육수준, 직업훈련, 직무경험 등에 의존
 -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 기업차원에서의 직업훈련의 활성화는 1인당 인적자본을 증가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기술수준의 향상]

- A는 한 경제에 존재하는 기술수준 혹은 기술지식을 통칭하며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에 의존
- 따라서 R&D 활동 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는 그 경제의 기술지식을 향상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 그러나 1인당 생산량(노동생산성), 1인당 생산요소(물적자본의 양, 인적자본의 양) 등과는 달리 이러한 기술수준 A는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변수

[기술수준의 측정]

- $A = \frac{Y/L}{f(K/L, H/L)}$
- $\frac{Y_2/L_2}{Y_1/L_1} = \frac{A_2}{A_1} \times \frac{f(K_2/L_2, H_2/L_2)}{f(K_1/L_1, H_1/L_1)}$
- 1인당 생산량의 비율=기술수준의 비율*1인당 생산요소 축적량의 비율 → 두 시점 간 1인당 생산량의 차이를 기술수준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생산요소 축적량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발전회계라 함

[기술수준의 해석]

- 이 때 A의 변화율은 1인당 생산량의 변율을 중에서 1인당 생산요소의 축적에 의해 설명되고 남은 부분을 의미
- A는 노동 뿐만 아니라 여타 생산요소의 축적을 모두 감안한 것이므로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고도 부름

[생산요소VS생산성]

- #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하므로 생산요소의 축적에 따른 경제성장은 언젠가 그 한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음
- 한계생산 체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진보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 기술진보는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가능

[요약]

- 1인당 실질GDP는 1인당 실질소득액과 1인당 실질생산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므로 경제 성장(생활수준)과 노동생산성 수준을 동시에 나타내는 지표
- 총생산함수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수준의 결합으로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기술수준과 1인당 생산요소 수준의 차이로 설명됨
- 두 시점 혹은 두 국가 간 1인당 생산량의 차이를 기술수준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1인당 생산요소 축적량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발전회계라 함
- 생산요소의 한계생산 체감에 따라 생산요소 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필요

(11-3) 경제성장의 결정요인2: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정부정책]

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수행

- 저축과 투자의 촉진과 외국 자본의 유치
- 교육의 활성화와 건강 증진
-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 안정
- 자유무역의 촉진
- 연구개발의 장려

그러나 정부예산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여타 정책들(ex.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정책)과의 상충관계가 존재

-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임과 동시에 응용경제학적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이해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는 높은 상관관계

- 일반적으로 저축-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음

소비-저축 간의 상충관계는 소비-투자 간의 상충관계로 연결

- (저축-투자를 통한) 미래의 소비를 늘리려면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함

[외국자본의 유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도모

외국자본의 투자 유형

-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자본이 기업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취득해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외국자본이 국내기업 자원조달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
- 장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할 경우 경영기술, 생산기술 등이 구간의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되는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 단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국가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조세감면 등의 특혜

를 제공

[교육과 건강]

- # 교육과 직업훈련은 인적자본 형성의 과정이며 물적자본의 형성 못지 않게 중요
 - 국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며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용이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기초교육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실시
- # 노동자들이 건강할수록 생산성이 높으며 따라서 건강 및 보건의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직접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건강 문제는 교육기회의 부족과 함께 저소득국가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재산권의 확립 등 정치 및 경제제도의 안정]

- # 재산권의 확립: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경제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확립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려움
- # 마찬가지로 정치 및 경제제도의 안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므로 투자율이 낮음

[자유무역의 촉진]

- # 세계화의 촉진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세계화는 선진국에게만 이득을 주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손해를 끼쳐왔으며 따라서 전세계적인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견해도 존재
 - 그러나 적어도 대외지향적(수출지향적)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던 국가들(한국, 중국)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것은 사실
- # 자유무역의 촉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경로
 - 생산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 규모의 경제 하에서 시장확대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 수출-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연구개발투자의 전이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 # 대부분의 기술진보는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발생
 - : 정부는 직접 공공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민간에 연구개발 투자비를 지급, 세제 감면, 특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도 함

[요약]

- 저축-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경제성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12-1) 총수요곡선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앞서 학습한 거시경제학이 주요 변수들(GDP, 물가, 실업 혹은 고용)이 어떠한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결정되는가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틀

- 경기호황: GDP ↑, 물가 ↑, 실업 ↓, 고용 ↑
- 경기불황: GDP ↓, 물가 ↓, 실업 ↑, 고용 ↓
-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

거시경제학에서의 '총'의 의미는 한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든 상품시장에서의 수요 혹은 공급을 합산하였다는 개념

- 미시경제학에서의 시장수요·공급은 단일 상품시장에서 각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

[총수요곡선]

-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물가)과 모든 상품에 대한 전체 수요(총수요) 사이의 관계
- 단위가 서로 다른 상품들의 수요량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총수요는 각 수요량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하되 시장가치는 기준년도의 가격을 적용(결국 이는 실질 GDP 특히 실질지출총액의 개념과 일치)
-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나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
- 단일 시장에서의 가격과 달리 여기에서의 물가는 측정되는 모든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

[총수요곡선: 우하향]

GDP의 지출측면에서의 분해: $GDP = C(\text{소비지출}) + I(\text{투자지출}) + G(\text{정부지출}) + NX$

- 소비지출(C): '부의 효과' 모든 상품의 평균적 물가 상승 → 소비자의 부 감소 →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감소 → 소비지출 감소/만일 임금도 물가와 동일하게 상승한다면 이를 통한 부의 효과는 없으나, 소비자가 현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부의 효과가 작용
- 투자지출(I): '이자율 효과' 투자대상 실물자본 등의 물가상승 → 일반저금로 이자율 상승 → 기업의 부담 증가 → 투자지출 감소
- 순수출(NX): 수출품의 물가상승(수입품 물가의 상대적 하락) → 수출감소, 수입증가 → 순수출 감소

정부지출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GDP의 모든 지출구성요소들(C, I, NX)은 물가와 음의 관계를 가짐: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수요곡선의 이동]

- 총수요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비가격변화가 발생하면 총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총수요 증가(AD의 우측 이동) 요인

1. 소비: 미래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로 저축감소,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
2. 투자: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
3. 순수출: 외국의 경제성장,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 인하

총수요 감소(AD의 좌측 이동) 요인

1. 소비: 미래소득에 대한 비과녁 7인 기대로 저축증가, 정부의 소득세 증세정책

2. 투자: 경기침체에 대비한 기업의 지출 감소, 정부의 법인세 증세정책

3. 순수출: 외국의 경기침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 인상

정부지출(G)은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 예를 들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정부지출이 확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정부의 정부지출 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틀어 정부의 재정정책이라 함

-

[요약]

-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GDP, 물가, 실업 등이 어떠한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며 결정되는가를 이해하는 모형으로 단기적 경기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

- 총수요곡선은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물가)과 전체 수요(총수요)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비, 투자, 순수출 등 GDP의 지출구성요소들과 물가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

-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 소비, 투자, 순수출 등이 변화하게 되면 총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지출은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이를 정부의 재정정책이라 함

(12-2) 총공급곡선

[단기총공급곡선]

총공급곡선

- 한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물가)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량(총공급) 간의 관계

단기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데 미시경제학에서의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

- '이윤=수입-비용': 최종재의 물가수준이 상승(수입상승)할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비용의 상승이 적어 이윤이 증가

-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들은 기꺼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려 함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

- 최종재의 물가수준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에서 투입요소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이라 함

- 이러한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은 계약 혹은 관행의 존재에 기인

- 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임금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원자재 등의 중간투입요소들도 1년 이상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 반면 최종생산물에 대해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

[장기총공급곡선]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

- 장기는 투입요소의 가격(임금, 임대료, 원재료 가격 등)이 경제상황의 변화 즉 물가의 변화

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

- 최종재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임금, 임대료 원재료 가격 등도 인상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가격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량도 가격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수직인 장기공급곡선은 물가가 한 경제의 장기공급량을 결정하지 못함을 의미

잠재산출량, 자연산출량, 잠재GDP

- 잠재산출량은 장기총공급곡선이 나타내는 경제전체의 산출량인데, 이는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용량이 완전히 가동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을 의미
- 잠재산출량은 실업률이 정상상태 혹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할 때의 산출량 수준으로 정의되기도 함
- 따라서 잠재산출량은 그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

[장기총공급곡선의 이동]

장기의 잠재산출량은 물가수준과 고나계없이 이용가능한 생산 투입요소의 양과 기술수준 등에 의해 결정

-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이동

결국 경제성장은 장기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안정적으로 밀어내는 과정, 즉 잠재산출량의 증가를 의미

- 이러한 잠재산출량의 증가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발견이나 기존 생산요소의 축적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

장기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 사례

- 기술: 기술혁신으로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로 더 많고 생산 가능
- 자본: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의한 자본축적
- 노동: 이민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
- 교육: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자원: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장기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사례

-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전체에 경제활동 인구 혹은 고용이 감소
-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가능 토지의 감소

[단기총공급곡선의 이동]

장기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모든 요인들(생산요소의 축적, 기술향상 등)은 단기총공급곡선도 이동시킴

- 그 이외에 단기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추가적인 두 가지 요소는 생산비용과 예상물가수준의 변화

1. 생산비용의 변화: 같은 물가수준에서 생산비용이 변화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이동

: 예를 들어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산출량이 감소

2. 예상물가수준의 변화

- 예상물가수준의 변화는 물가수준의 실제 변화가 아닌 기업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예상)의 변화

- 기업의 예상물가수준이 상승→현재의 물가수준보다 미래의 물가수준이 더 높을 것을 예상하

기에 현재의 물가수준에서 기업은 산출량을 감소시킴→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요약]

- 총공급곡선은 한 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과 기업들의 전체 생산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하는데 물가의 변화가 투입요소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기 및 장기 총공급곡선으로 구분
- 단기총공급곡선은 투입요소 가격의 변화가 최종재 물가상승에 대해 늦게 반응(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하게 되어 우상향하는 모양
- 투입요소 가격이 최종재 물가상승을 완전히 반영하게 되는 장기총공급 곡선은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인 모양
- 잠재산출량은 그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 등 장기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이 변화할 때 장기총공급곡선은 이동
- 단기총공급곡선은 장기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변화하면 이동하며, 생산비용의 변화 및 예상물가수준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동

(12-3) 거시경제적 균형과 경기변동

[거시경제균형: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 단기균형: 총수요곡선과 단기총공급곡선의 교차점
- 장기균형: 총수요곡선-단기총공급곡선-장기총공급곡선의 교차점
- 장기균형은 단기생산량수준이 장기잠재생산량과 같을 때 달성
- 이때 균형물가수준과 균형생산량수준이 결정

[경기변동]

- 단기균형 생산량 > 장기균형 생산량: 경기호황
- 단기균형 생산량 < 장기균형 생산량: 경기불황
- 단기균형점이 장기균형 생산량을 중심으로 변동할 때 경기변동이 발생

[참고: 한국의 경기변동]

- 잠재성장률: 장기균형산출량의 성장률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경기호황이라 하며 낮은 경우를 경기불황이라 함

[총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총소비 증가(ex.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
→ 단기 균형의 이동 → 경기호황: 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초과, 물가 상승

장기조정

- E_2 는 단기균형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 → 물가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도 상승 → SRAS의 좌측이동 → E_3 에서 장기 균형 및 단기균형이 동시에 달성
- 총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키며 산출량은 불변

[총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총소비 감소(ex.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효과) → 총수요곡선의 좌측 이동 → 단기균형의 이동 → 경기불황: 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하회, 물가하락

장기조정

- E_2 는 단기균형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 → 물가하락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도 하락 → SRAS의 우측이동 → E_3 에서 단기 균형 및 장기 균형이 동시에 달성
- 총수요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물가만 하락시키며 산출량은 불변

[단기총공급 변화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일시적 공급충격(ex. 일시적인 유가상승) → 단기총공급곡선 좌측 이동 → 단기균형의 이동 → 스태그플레이션: 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하회, 물가상승

장기조정

-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상승과 고용감소가 동시에 발생 → 물가-임금의 반복적 상승(물가-임금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종국적으로는 실업률 증가(고용의 하락)에 따라 임금은 하락 → 장기 및 단기균형은 회귀(산출량과 물가 모두 불변)

(13-1) 단기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재정정책]

재정정책: 정부지출과 조세수입 규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

- 재정정책은 가계와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공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 수행하기도 하지만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행
-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해 한 경제의 소득수준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총수요 = $C + I + G + NX$

1. 정부지출의 조정

- 직접 효과: G 의 변화
- 간접 효과: C 와 I 에 영향(승수효과, 구축효과)

2. 조세수입의 조정

- 간접 효과: C 와 I 에 영향(가계의 가처분소득 혹은 기업의 가처분잉여에 영향)

[재정정책의 유형]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불황에 대응

-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인하
- 산출량은 증가(실업은 감소)하나 물가수준은 상승

긴축적 재정정책: 경기과열에 대응

-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금을 인상
- 산출량은 감소(실업은 증가)하고 물가수준은 하락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

거시경제의 단기적인 불균형 상태는 임금 등 생산비용의 변화에 따라 장기균형으로 조정되

어 갈 것, 그 과정이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경기변동에 대응한 경기안정화 정책을 수행

정부가 총수요를 조절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

1. 찬성론자: Keynes학파

-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2. 반대론자: Chicago학파

- 정부정책은 시차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안정화 정책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함

[재정정책의 시차]

경제안정화 정책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재정정책 수행에 따르는 시차의 문제는 인정

1. 정보시차

- GDP, 물가, 실업 등 거시경제변수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집계

- 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은 이미 수 개월 전의 거시경제에 관한 정보

2. 정책형성시차

-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 재정정책 방향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시간

3. 집행시차

- 재정정책이 집행된 후 실제로 총수요가 변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동안정화 장치]

자동안정화 장치: 정책입안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나 정부지출 정책

1.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조세

- 소득세 체계는 일반적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

- 경기과열(불황)→소득증가(감소)→높은 세율의 소득자 증가(감소)→조세수입 증가(감소) 효과
→총수요 감소(증가) 효과

2.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정부지출

-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는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작동하는 정부지출의 한 예

- 경기불황(과열)→사회복지제도 수급자의 증가(감소)→정부지출이 증가(감소)효과→총수요증가(감소)효과

[요약]

- 조세수입과 정부지출 규모의 결정을 통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해 단기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은 산출량은 증가(실업은 감소)시키나 물가수준을 상승시키며, 긴축적 재정정책은 물가수준은 하락시키나 산출량은 감소

- 재정정책을 총수요 정책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은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응호

-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재량적 개입 없이도 경기안정화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함

(13-2) 재정정책과 총수요

[소득-지출 모형]

<총생산=총소득=총지출>에서 총소득과 총지출의 거시경제적 동일성을 이용하여 총수요의 구성하는 항목이 변할 때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석

- 소득-지출 모형에서는 총생산(총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
- 소득-지출 모형은 추후에 총생산(총공급)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모형으로 이해

총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

- 가정

1. 물가수준은 고정

2. $C=a+b(\text{소득}-t)$: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총소득-총조세)의 함수/a: 최저소비수준(가처분소득이 0인 경우), b:한계소비성향($0 < b < 1$)

- 한계소비성향: 가처분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증가하는 소비액, 0보다는 크지만 저축에 의하여 1보다는 작음

[승수효과의 도출]

정부가 정부지출을 1원 증가시키면 총수요는 $1/(1-b)$ 만큼 증가하는데 이를 정부지출승수라 함

-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승수는 총수요에 대한 정부지출의 한계효과
- 따라서 정부지출이 G만큼 증가할 때 총수요의 변화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

위 식의 의미

- 정부지출승수는 항상 1보다 큼

정부지출의 증가는 정부지출 증가 자체에 의한 총수요 증가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라 함

- 결국 정부지출의 증가는 정부지출승수에 정부지출 증가분을 곱한 것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킴

그래프에 의한 설명

- 정부지출의 증가는 각 물가수준에서

1. 정부지출 증가분만큼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2. 추가적인 소비지출의 증가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다시 한번 우측으로 이동

[조세의 승수효과]

- 규모가 동일한 경우 정부지출의 효과가 조세감세의 효과보다 더 큼
- 정부지출은 정부지출의 직접효과와 소비지출에 대한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조세감세는 소비지출에 대한 간접효과만 존재하기 때문

[정부지출의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1. 긍정적 효과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부지출은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2. 부정적 효과

- 정부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과도한 정부차입은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
- 이자율 상승은 결국 기업의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므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 존재
- 민간투자가 정부지출에 의해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효과라 함
-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변화시켜 소득수준과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가지출을 늘리거나 간접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13-3) 재정정책의 효과와 정부부채

[총수요-총공급 모형 하에서 재정정책이 효과]

만일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면 최종적인 정부지출 증가 효과는 더욱 축소

[정부지출의 원천]

정부지출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액

-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지출 규모가 조세수입액과 일치할 때 균형재정을 이루었다고 말할
- 재정적자: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지출>조세수입
- 재정흑자: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지출<조세수입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분만큼의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로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민간 혹은 해외정부 등이 매입할 경우 정부는 미리 약정된 이자율을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
- 일반적으로 국공채는 정부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을 보증하기에 안전자산으로 인식

[정부부채]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국공채 등을 발행하여 재정적자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정부부채(국가채무)가 발생

- 재정적자가 누적된 합계가 정부부채 규모이며, 이는 정부가 갚아야하는 부채의 총액을 의미
- 과도한 규모의 정부부채는 결국 그 국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재정적 부담이므로 적절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

[정부부채의 편익과 비용]

정부부채의 편익

1.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2.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투자활동 촉진(교육 및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

정부부채의 비용

1. 직접비용: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
2. 간접비용: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 세대간 불평등 문제(현 세대의 정부에서 과도한 정부부채가 발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14-1) 금융의 기초

[금융시장]

금융시장: 여유자금을 남에게 빌려주고자하는 경제주체(자금공급자)와 이 여유자금을 빌려쓰고자하는 경제주체(자금수요자)들을 연결해주는 시장

1. 직접금융시장

- 자금수요자가 발행하는 본원증권을 자금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방식
- 채권 시장: 기업이 일정기간 후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가 발행, 거래
- 주식 시장: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가 발생, 거래

2. 간접금융시장

-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는 방식○
- 은행을 통한 예금과 대출

[금융시장의 기능]

1. 자금의 효율적인 중개
2.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
3.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분산

[금융의 거시경제적 해석]

국내총소득=국내총지출: $Y=C+I+G$

-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폐쇄경제를 가정하여 순수출은 제외

$Y-C-G=I$

- $S=Y-C-G$: 총소득에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이며 이를 국민저축 혹은 저축이라 함

- $S=I$: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은 투자와 일치

$S=Y-C-G=(Y-T-C)+(T-G)$

- $Y-T-C$: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민간저축)
- $T-G$: 조세 수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정부저축)
- 국민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

$S=I$

-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자금의 공급)은 투자(자금의 수요)와 일치
- 얼마나 저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조정해주고 이 두 경제행위를 연결시켜주는 시장이 금융시장
- 이 식으로부터 금융시장에 대한 간단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를 대부자금시장 모형이라고 함

[대부자금시장모형]

대부자금시장

- 대부자금이란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려는 자금과 투자자들이 저축자들로부터 빌려려는 자금을 동시에 의미
- 실제로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틀어 대부자금시장이라고 일반화한 개념
- 대부자금시장도 시장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 대부자금의 가격은 이자율

대부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

- 수요곡선은 우하향: 이자율 상승 → 대출비용 상승 → 대부자금 수요량 감소
- 공급곡선은 우상향: 이자율 상승 → 저축수익 상승 → 대부자금 공급량 증가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 수요와 공급 즉 투자와 저축이 일치할 때 균형 이자율 및 균형 대부자금 규모가 결정
- 대부자금시장 모형은 한 국민경제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

대부자금시장 균형의 변동

1. 수요곡선(투자)의 변동

ex. 현재 투자기회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 →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투자 증가 → 대부자금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 이자율 상승

2. 공급곡선(저축)의 변동

ex.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저축의 필요성 저하 →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 감소 → 대부자금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 이자율 상승

(14-2) 화폐와 중앙은행의 역할

[화폐의 기능]

1. 가치의 저장 기능: 시간이 흘러도 명목가치가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
 - 화폐의 실질가치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화
2. 교환의 매개 기능: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
 - 물물교환이 갖는 거래비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제거
3.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위를 제공
 -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

[화폐의 창출]

은행제도는 부분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을 통해 한 경제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창출

- 요구불예금: 예금자가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종류의 은행예금
- 지급준비금: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 부분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율을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제도로써 은행제도는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요구불예금을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대출
- 모든 저축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한느 경우는 드물기에 부분 지급준비제도가 가능

[화폐창출의 과정]

통화승수

- 초기에 존재하는 화폐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발권한) 화폐량
- 통화승수는 결국 중앙은행이 발권한 화폐량 대비 은행체계의 대출행태를 통해 창출된 화폐량의 배수
- 화폐의 발권량이나 통화승수를 조절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중앙은행이라 하며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화폐량(화폐공급)을 조절

[중앙은행]

중앙은행: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역할

1. 통화정책의 수행: 특정한 거시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 등을 조절하는 행위
2. 최종대부자의 역할: 경제위기 등으로 저축자들이 예금을 일시에 찾아가려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일반은행들에게 최종적인 대부자로서 대출을 수행할 수 있음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

1.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준비율↓ → 통화공급량↑
2. 재할인율정책: 재할인율↓ → 통화공급량↑

: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할 때의 이자율

: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시중은행이 빌려가는 대출이 증가하므로 통화공급량이 증가

3. 공개시장조작: 국공채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 → 통화공급량 증가

(14-3)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유형]

1. 확장적 통화정책

: 화폐공급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

2. 긴축적 통화정책

: 화폐공급을 줄임으로써 총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책

→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틀어 총수요관리 정책이라고도 부름

[유동성선호 모형]

유동성선호 모형은 이자율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를 설명

- 유동성선호라는 것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인 화폐에 대한 수요를 의미
- 유동성선호 모형에서는 유동성(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완벽히 통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유동성(화폐)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둠

대부자금시장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모형

- 대부자금시장 모형은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일치시키는 자금의 균형 가격이라고 설명하는데 반해, 유동성선호 모형은 이자율을 일정기간 동안 유동성(화폐)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설명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를 수요(보유)하는 목적

1. 거래적 동기: 일상적 거래를 위한 화폐보유
2. 예비적 동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보유
3. 투기적 동기: 자산의 한 형태로서 화폐보유(이자율 \uparrow \rightarrow 채권보유 유리, 화폐보유 불리 \rightarrow 화폐보유 \downarrow)

유동성 선호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화폐 혹은 채권을 자산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는 투기적 동기를 강조

- 화폐: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높으나 이자가 없음
- 채권: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낮으나 이자를 지급

화폐수요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이자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화폐수요 증가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화폐수요 자체가 변화

- 거래적 동기: 물가수준, 국민소득 $\uparrow \rightarrow$ 화폐수요 \uparrow
- 예비적 동기: 경제위기 예상 $\uparrow \rightarrow$ 화폐수요 \uparrow

[화폐에 대한 공급]

화폐에 대한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것으로 가정

- 가계나 은행의 행태에 따라 화폐창출에 의한 통화승수가 변화할 수도 있으나 통화승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임
- 이는 화폐공급곡선이 수직임을 의미

[화폐시장의 균형 및 변화]

화폐시장의 균형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할 때 달성

- 이 때 균형이자율과 균형화폐량 수준이 결정
- 균형이자율=화폐의 가격(혹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

중앙은행이 통화(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키면 화폐시장 균형은 변화

- 지급준비를 인하, 재할인을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 \rightarrow 화폐공급 증가 \rightarrow 균형이자율 하락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의 궁극적 효과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파악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 통화량 증가 \rightarrow 이자율 하락
-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저축감소(소비증가), 투자증가 \rightarrow 총수요증가
- 총산출량 증가, 물가 상승
- 증가하는 총수요 항목의 변화만 있을 뿐이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동일한 결과

[통화정책의 문제점: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도 재정저액과 마찬가지로 시차의 문제 등이 발생

: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므로 재정정책에 비해 시차의 문제가 덜 심각

한 것은 사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점

- 유동성 함정: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서 통화공급량이 변화하더라도 이자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확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인하시키지 못하므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함정은 높은 수준의 이자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자율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자율이 이미 0%에 가까운 경우에는 확장적 통화정책 → 이자율 하락 → 소비 및 투자 증가라는 경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
-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하기도 했음

-

[요약]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 화폐수요와 이자율 간의 반비례 관계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을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 등을 통해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면 화폐시장에서 일단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는 소비와 투자지출을 증가시켜 총수요가 증가
- 그러나 유동성 함정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

(15-1)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흐름

[개방경제와 국제수지]

개방경제: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국민경제

-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무역(수출과 수입)
- 자본의 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국제투자(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투자)

일정기간 동안 개방경제의 대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취와 지급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을 국제수지라 함

-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등의 항목으로 구분
- 무역에 —이한 경제적 관계는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제투자에 의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금융계정의 대부분을 차지

[참고: 국제수지표]

경상수지의 대부분 차지=무역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순수출(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 무역수지 흑자: 순수출>0
- 무역수지 적자: 순수출<0
- 무역수지 균형: 순수출=0

순수출 혹은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

- 순수출의 발생=무역수지 흑자=경상수지 흑자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순자본유출=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등의 형태
- 순자본유출>0이면 순자본유출(내국인의 돈이 해외에 더 많이 빠져나간 것)이 일어난 것임
(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 순자본유출<0이면 순자본유입이 일어난 것임(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순자본유출(유입)은 자본금융계정의 대부분을 차지

- 순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융계정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됨
- 그러나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본이 밖으로 빠져 나간 것이므로 이 경우 자본금융계정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함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언제나 순수출=순자본유출

- 순수출이 100억 달러이면 순자본유출도 100억 달러
- 순수출이 1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00억달러
- 순자본유출이 100억달러: 자본금융계정 적자규모가 100억달러
- 경상수지 흑자 규모=자본금융계정 적자 규모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언제나 순수출=순자본유출

ex) 한국기업 A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고 가정

1. 순수출 측면: 수출액만 증가하였으므로 순수출은 100억 달러 증가

2. 순자본유출 측면

- 한국기업 A의 선택

1. 100억 달러 현금 보유
2. 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채권이나 주식 매입

→ 한국입장에서는 내국인이 해외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한국의 순자본유출은 100억 달러 증가

- 한국기업 A의 또 다른 선택은 100억 달러를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 그러나 100억 달러를 새로 가지게 된 국내은행은 기업 A와 똑같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

→ 이 경우에도 한국의 순자본유출은 100억달러 증가

[저축, 투자 및 국제거래]

국제거래는 저축 및 투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

$Y=C+I+G+NX$

$NX=Y-C-G-I=S-I=NCO$ (순자본유출)

1. 순수출 발생(무역수지 흑자) → 국내총생산이 소비·투자·정부지출을 초과 → 저축이 투자지출을 초과 → 순자본유출 발생(자본금융계정 적자)
2. 순수입 발생(무역수지 적자) → 소비·투자·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을 초과 → 투자지출이 저축을 초과 → 순자본유입 발생(자본금융계정 흑자)

[요약]

- 개방경제는 무역이나 자본의 이동 등 대외거래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경제를 의미
- 개방경제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취의 흐름을 측정한 것을 국제수지라 함
- 순수출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것이며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 무역수지 흑자 상태라 함
- 순자본유출은 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에서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을 차감한 것이며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자본금융계정 적자상태라 함
-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순수출은 언제나 순자본유출과 동일

(15-2) 외환시장

[외환시장과 환율]

외환시장: 외국의 화폐(외화)가 거래되는 시장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의 가격을 환율이라 함
- 원화와 미국 달러화가 교환되는 시장을 원-달러 시장이라 하고 이 때 원화와 미국달러화 간의 교환비율을 대미달러 환율이라 함
- 대미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원-달러 시장에서 1달러 당 1000원의 원화가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화폐가 교환되는 장소이므로 두 국가경제의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 환율의 변화는 대외거래를 하는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들의 수익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

[환율변동과 순수출]

환율변동의 의미

- 환율상승: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
- 환율하락: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

환율의 순수출과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환율상승(1000→2000)을 가정

1. 수출측면

-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함에 유의
- 1000원짜리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은 1에서 0.5로 하락
- 수출품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품 수요량 증가
- 수출품의 수요증가가 충분히 크다면 달러표시 수출액 증가

2. 수입측면

- 수입품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함에 유의
- 1달러짜리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
- 수입품의 국내시장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품의 수요량 감소
- 수입품의 수요감소가 충분하다면 원화표시 수입액은 감소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 표시 수입액도 감소

→ 환율상승에 따라 순수출 증가(수출액 증가, 수입액 감소)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외화에 대한 수요(외환시장에서의 수요)

-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해외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
- 환율상승→원화가치의 하락→수입품과 해외자산의 원화표시 가격 상승→수입품과 해외자산의 수요감소→외화에 대한 수요감소→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외화에 대한 공급(외환시장에서의 공급)

-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
- 환율상승→달러가치의 상승→수출품과 국내자산의 달러표시 가격 하락→수출품과 국내자산의 수요증가→외화에 대한 공급증가→외환시장에서의 공급곡선은 우하향

[외환시장에서의 균형]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할 때 외환시장의 균형이 발생하고 이 때 균형 환율과 균형 외환거래량이 결정됨

[외환시장 균형의 변동]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환율의 변동이 발생

- 국내외 이자율, 국내외 경제에 대한 신뢰 등에 의해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받음
- 국내 이자율 상승→해외자본이 국내로 이동하면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도 감소→국내로부터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환율상승(원화가치의 하락)

[요약]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이 가격을 의미하며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
-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품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입품의 국내시장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일반적으로 순수출을 증가시키게 됨
- 균형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 국내 이자율의 상승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유발하여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환율이 하락
- 국내 경제에 대한 대외신뢰가 감소하면 자본의 해외유출이 발생하여 외화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환율이 상승

(15-3) 개방경제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

[환율제도]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변동환율제도라 함

-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 놓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제도를 고정환율제도라 함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부작용(수출입 및 해외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

부 국가들이 채택

- 한국의 경우도 1990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에 가까운 환율제도를 유지
- # 어떤 환율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달라지나, 본 강의에서는 변동 환율제도를 가정하고 논의

[환율과 총수요-총공급모형]

- # 환율의 변화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동시에 변화시킴
- 환율상승 → 순수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환율상승 → 수입재의 원화가격 상승 → 생산비용 증가 → 총공급 감소
- # 환율이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국민소득 혹은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나 물가는 반드시 상승
- 일반적으로 환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보다 큼

[거시정책 효과의 전달경로]

-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수행은 총수요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이자율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
- 확장적 재정정책 → (정부차입 증가에 따라) 이자율 상승
- 확장적 통화정책 → 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 하락
- # 이자율의 변동은 자본의 이동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변동시킴
- 이자율 상승 →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 → 환율 하락
- 이자율 하락 →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 → 환율 상승
- # 환율의 변동은 다시 총수요-총공급에 영향을 미침

[재정정책의 효과]

- #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율 상승
- 직접적으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킴: 산출량증가, 물가상승
- 여기까지가 폐쇄경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
- # 개방경제에서 이자율 상승은 환율을 하락시킴
- 환율하락에 따라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총수요가 감소하고(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총공급은 증가
- # 따라서 산출량의 증가폭과 물가의 상승폭은 폐쇄경제에 비하여 개방경제 하에서 더 적음
- 개방경제 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환율로 인한 변동에 의해 일정 정도 상쇄

[통화정책의 효과]

- # 확장적 통화정책: 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 하락
-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킴: 산출량 증가, 물가 상승
- 여기까지가 폐쇄경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 # 개방경제에서 이자율 하락은 환율을 상승시킴
- 환율상승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총공급은 감소
- # 따라서 산출량의 증가폭과 물가의 상승폭은 폐쇄경제에 비하여 개방경제 하에서 더 큼

- 개방경제 하에서의 통화정책의 효과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증폭

[개방경제 하에서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결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정책 혹은 총수요관리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

- 조금 더 복잡한 분석을 통해 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임을 보일 수 있음

[요약]

- 환율의 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수입재의 원화가격을 상승시켜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킴
- 따라서 환율상승은 총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총공급을 감소시킴
- 개방경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자율 상승 및 환율 하락을 유발하게 되어 폐쇄경제 하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덜 효과적
- 개방경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 및 환율 상승을 유발하게 되어 폐쇄경제 하에서의 확장적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
- 따라서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개방경제의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